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허가 ·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



 법제처 · 국무조정실 · 관계부처 합동

목차

1

인허가 · 신고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2

인허가 및 협의 간주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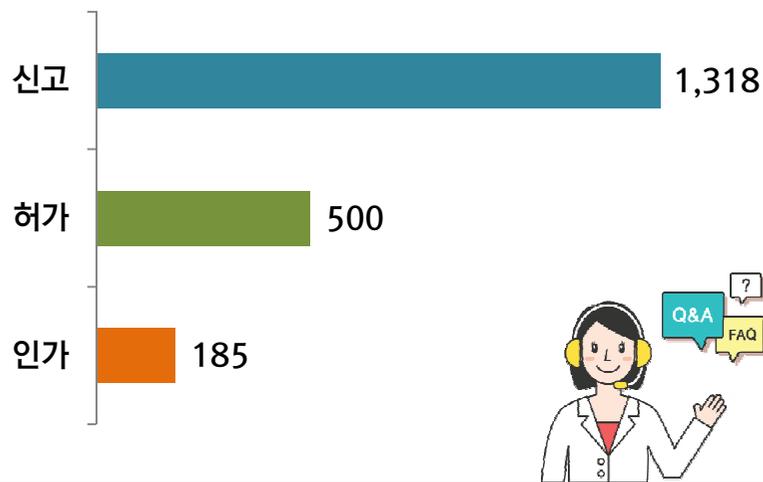
신고제도를 명확하게 바꾸겠습니다.

4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인허가·신고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인가, 허가, 신고가
전체 민원 사무 5,077개 중
2,003개(약 40%) 차지



* 민원사무처리기준표(3. 31. 기준)

공무원의 소극행태

부당집행

능장처리

행정의 예측가능성 저해
신뢰도 저하

기업 활력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1. 인허가 · 신고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건축허가

- ✓ A씨는 3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



다른 기관과 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처리 지연”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 ✓ 어업에 종사하는 B씨는 민박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춰 신고서를 제출



신고 요건을 심사한다는 이유로
“접수 지연”

1. 인허가 · 신고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 경제활성화를 위해 영업활동 관련
인허가, 신고 규정 우선 검토 ”

인허가(국조실) 및 신고(법제처) 합리화 과제 현황



총 201개 개선과제 발굴

2. 인허가 및 협의 간주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인허가 간주 제도란?

행정청이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옥외광고물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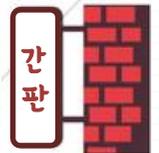
▶ 간판, 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게시하기 위한 허가

▶ 20일 이내에
허가여부 또는 지연사유
미통지 시 허가 간주



※ 연간 옥외광고물 허가 · 신고 건수 약 918,000건

✓ 옥외광고물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
62개의 인허가에 확대 도입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인허가 및 협의 간주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인허가 투명화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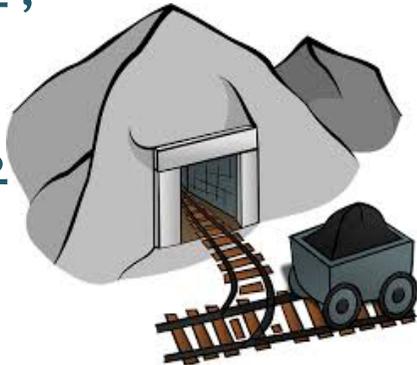
처리기간 규정이 없는 인허가 등에 **처리기간 설정**,
처리 지연 및 처리기간 연장 시 통보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광업권 설정 허가 및 연장허가

- ▶ 광업권(광물의 탐사권과 채굴권) 설정을 받기 위한 허가.
존속기간이 끝나는 채굴권을 연장하기 위한 허가

- ▶ 광업권 설정 허가는 15일,
연장허가는 14일 이내
허가 여부 또는 지연 사유
통지



- ✓ 광업권 설정, 의연금품 모집허가 등
11개의 인허가에 확대 도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인허가 및 협의 간주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협의 간주 제도란? 다른 기관과 협의를 거쳐 처리 해야 하는 복합민원의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



건축 허가

▶ 건축허가에 따라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에 대해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

▶ 의제되는 21개 인허가에 대해 협의 요청 시 15일 내 의견 제출



※ 연간 건축허가 건수 약 200,000건

✓ 건축허가, 공장 건축허가 · 공장등록 등 28개의 복합민원에 추가 도입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신고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신고 1,300개

✓ 수리가 필요한 신고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 발생

✓ 법령에서 명확히 구분!

✓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수리가 “없어도” 효력 발생

3. 신고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신고

처리기간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



의약품 제조업 신고

▶ 의약품(마스크, 붕대, 치약 등) 제조를 하기 위한 신고

▶ 15일 이내에 수리여부 또는
지연사유 미통지 시
수리 간주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교습소 신고 등

85개의 신고제 개선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15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수리가 된 것으로 본다.”

3. 신고제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형식적 요건(신고서, 첨부서류 등)을 갖춰 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접수하도록 의무화



영화업 신고

▶ 영화를 제작·수입·배급·상영하기 위해 신고

▶ 영화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접수



• 영화업 신고,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신고 등

15개의 신고제 개선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4.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인허가 및 신고 제도 개선



인허가 간주 도입



옥외광고물
허가 등

약 918,000건

협의 간주 도입



건축허가

약 200,000건

수리 간주 도입



교습소 및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

약 21,592건

4.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인허가, 협의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

- 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제고
- 신속한 집행 유도

불분명한
신고 규정을 정비

- 자의적 해석, 부당한 운영 방지



감사합니다

